

담양 창평 완도 청산 슬로시티 재인증 '장애물' 넘을까



골목길 따라 느리게 걷기 12일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삼지내 마을)를 찾은 가족들이 고즈넉한 돌담길과 한옥 사이에 난 골목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지정된 창평 슬로시티는 내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담양 창평과 완도 청산도가 내년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 올해부터 중단되고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재인증 요건도 강화되면서 재인증을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담양 창평 슬로시티(삼지내마을)와 완도 슬로시티 청산도는 내년 5월 국제 슬로시티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12년 슬로시티로 재인증된 뒤 5년 만이다. 당시 신안 증도와 장흥 장평·유치도 이들 지역과 함께 재인증을 추진했으나 장흥은 탈락했고, 신안은 잠정 보류된 뒤 지난 2014년 자격을 회복했다.

현재 담양·완도는 연간 수십 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이들 지역의 슬로시티를 찾은 관광객 수는 모두 49만 8000명. 지난 2014년엔 32만4000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지정 평가 항목 50여개→72개로 확대 '인증 요건 강화'
정부 "자생력 키워라" 연 5억 예산 지원 올해부터 중단
관광객 유치 큰 영향...담양·완도군 내년 5월 재인증 총력

완도는 숙박·식당인 '느린손 여행 학교'와 전통 어로체험 행사인 '취리', '조개공예' 등 다양한 문화·관광프로그램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이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마을 주민들에게 공동 배분되고 있다.

담양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달팽이 가게'와 '옛·한과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즈넉한 돌담길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슬로시티 지정 이후 마을 주민들의 화합은 물론 소득증진, 문화

유산 보존, 지역전통산업 활성화, 주민의식수준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내년에 슬로시티 재인증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편이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이 환경·기반시설·도시 품질 높이는 기술과 설비·지역 전통산업과 슬로푸드·주민의식수준 등 슬로시티 지정 평가 항목을 종전 50여개에서 72개로 확대하는 등 최근 인증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슬로시티 지역 민에 대한 자생력을 키운다는 이유에

산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것도 넘어야 할 장애물 중 하나다. 담양은 지난 2014년과 지난해 각각 3억원과 1억6000만원, 완도는 3억원과 2억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올해 예산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한 상태다.

담양·완도는 지난 2014년과 지난해 각각 운영기관을 사단법인화한 뒤 자생력을 키워간다는 입장이지만 법인 운영을 위해선 예산이 필요해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더욱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체험프로그램=상업화'라는 오프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없다"면서 "해당 지역 슬로시티 운영주체가 사단법인화 됐는데, 자생력을 키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협치'...20대 국회 오늘 개원

박대통령 연설·정세균 의장 개원사...여소야대 '뇌관' 수두룩

20대 국회가 13일 오전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개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듣고, 의원 전원이 선서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2월 '국정에 관한 연설' 이후 네 달만으로, 20대 국회의 시작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협치'와 민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 과제 추진에 국회가 조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개원식 이후 오후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구성을 완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8개와 2개의 상임위원장 인선을 각각 마무리한 상황이며 새누리당은 8개 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국방위원장·정보위원장 등 4개의 위원장을 내정한 상태다.

일단, 여소야대의 총선 결과로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탄생하고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19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예상보다 빠른 원구성으로 20대 국회의 출발은 표면적으로 순조로워 보인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곳곳에 숨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조선업계 구조조정 문제와 법인세 인상 논란 등으로 출발부터 난항이 예고된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칼을 빼 들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청문회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깎아내리며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19대 국회 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상시 청문회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리 검토를 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9 광주 세계수영대회 차질 없이 추진"

광주시, FINA에 회신

"사무총장 신속하게 선임"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창현 광주시장이 '개최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준비사항 이행을 촉구한 국제수영연맹(FINA) 측에 "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관련기사 5면>

윤 시장은 12일 코넬 마르클레스쿠 FINA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답신에서 지난 10일 FINA 측에서 광주를 방문해 세계수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신뢰와 지원을 확인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FINA와 대한수영연맹, 광주시가 상호 믿음과 협력 속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공유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FINA 측은 "선수권대회 예산, 마케팅·홍보계획, 경기시설 확정, 유능하고 경험있

탄은 등 옛 도청 복원 해법은? ▶6면

'혁신도시' 프랑스 앙티폴리스 ▶18면

는 조직위 사무총장 인선 등 4가지에 대한 즉각적 보충이 안되면 협약에 따라 개최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회신을 통해 "조직위원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수영대회 사무총장 인선 문제를 FINA 측이 서신으로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최적입자를 신속히 선임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고유권한' 등 표현은 윤 시장의 의지대로 사무총장을 선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시장은 나머지 확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로부터 대회예산 20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마케팅·홍보계획, 경기시설, 개최권료 지급 등이 일정과 규정대로 진행돼왔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광주지역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겪고 계신분이나 사망하신 분의 유족께서는 **지금 신청하세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 ◆대 상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등을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
- ◆지원범위(피해인정시)
 - 생존자 : 폐질환 등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폐질환의 유효기간 동안 지출되는 의료비
 - 사망자 : 폐질환 등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장례비
- ◆인정기준
 -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환경노출이 인정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병양상과 부합하는 소염증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이 조직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임상양상검토에 근거한 판독을 거쳐 확인되는 경우 등
- ◆접수처(우편 및 방문접수)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시 환경정책과
 - 각 자치구 보건소 민원접수 창구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 광주시 062-613-4162 동구 608-3303 서 구 350-4143
 - 남 구 062-607-4351 북구 410-8974 광산구 960-8773

광주광역시